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과 향후 과제

*An Overview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Policy
for Children and Tasks Ahead*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식생활에 기인한 어린이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발달과 가공식품 및 외식의 섭취가 증가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이 변화되었고, 학교 주변에는 여전히 식품안전상 위해가능성이 높은 식품섭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이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으로 학교 주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조리·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규제,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의 강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단독법의 제정이나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에서 다른 선진국가 보다 앞서 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모델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규제 중심보다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고, 식품산업체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식품교역이 활발한 오늘날 우리 식품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제 식품규제 기준과도 조화를 이루고, 우수하고 건강지향적 식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있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1. 서론

어린이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나타낸다. 아동기의 식생활은 일생에서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에 기본이 되는 물론 그 이후 생애에 걸쳐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적절한 식생활은 신체활동과 함께 전 생애에 걸친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결정요인으로써 어린이 식생활의

관리는 최근 정책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건강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축이 되어 2007년부터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특별법에서는

2010~2012년의 3년간의 제1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등 지자체에서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의 방향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과 사업의 현황

1) 어린이 식생활의 문제점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식생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린이의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특히 성인보다 어린이의 식생활이 크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식생활 문제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식생활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린이 계층의 쌀 소비가 줄고, 빵과 과자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야채류와 과일의 소비는 아주 낮은 수준이며, 외식이 크게 증가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특히 어린이 연령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는 햄버거, 라면, 피자 등 편리성과 서구화된 간편식과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고, 탄산음료와 가당 음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방과 당분의 섭취가 높아져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편, 그만큼

식품첨가물을 섭취할 기회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비만을 유발하며, 성장기 이후 성인병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패턴으로 바뀐 것이다.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세대들은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높은 질병부담을 갖는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둘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과 식습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식습관은 아침결식률이 높고, 저녁식사도 가정에서의 식사비중이 낮고, 학원이나 학교 근처 길거리 음식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조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주변 먹을거리의 위생과 안전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값싸고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위생관리가 취약한 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많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간식음식 조리판매업소, 식품을 취급하는 영세 문방구, 노점상 등 식품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학생이나 부모들도 아직까지 학교 주변의 먹을 거리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과장이 큰 식품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셋째, 학교급식의 확대,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시설 이용 어린이의 증가로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취학전과 학령기 어린이가 증가하였으나 식

재료의 위생과 영양적 품질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나 어린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교사가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실천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인터넷 정보의 오류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에 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품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급식시스템 부문을 지원하며, 어린이에 대한 식품 광고와 마케팅의 현혹을 줄여 건강한 식품선택을 하도록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

어린이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2006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발족되고, 2007년 2월에는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2009년 3월부터 발효)되어 어린이 식생활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면서 20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와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 대통령비서실에 「어린이안전점검자문단」 설치와 아동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 일련의 어린이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 표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해서 전세계에서 유래 없이 앞서가는 법령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알기 쉬운 영양표시 제도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제한 등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식생활정보의 제공,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가 공표된 바 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2009. 5. 8)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2009. 5. 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2009. 5. 8)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2009. 5. 8)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2009. 8. 5)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호등 표시제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추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법령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에서 국가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다양한 목표와 추진과제들이 검토되었고, 전문가 의견 및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와 수차례의 공개토론회 및 관련 부서 그리고 부처 의견수렴과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그림 1]과 같이 4대 전략목표에 대해서 11가지 세부 추진과제와 이와 관련된 29가지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4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 학교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확대·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개선
 - 어린이 건강 식생활 미디어 등 환경 조성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 향상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대상 및 영역 확대
 -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확보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 강화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식생활 안전관리 제도 정착화
 -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새로 제시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은 2007년 마련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의 일관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되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업을 추가하였다. 특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관련 인력(교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로서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영양표시개선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자인 식품산업체가 건강지향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2007년 마련된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에 비교할 때 종합계획은 특히 어린이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과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을 강화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핵심전략과 과제 검토안과 확정내용

검토 (안) ¹⁾			확정안 ²⁾		
핵심 전략	중점 과제		핵심 전략	중점 과제	세부 실천과제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1.1 학교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1.1 학교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보호구역 구분 지정 및 관리 영역 확대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신고 식품판매업체 판매금지 추진 • 학교 및 학교 주변 모니터링 체계화
	1.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소 안전관리 강화			1.2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 및 신고제도 마련
	1.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			1.3 어린이 건강 식생활 미디어 등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미디어 광고 제한 모니터링 • 어린이 정서저해 및 미끼 상품 광고 판매 금지
2.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 보장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	2.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 보장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생활 밀착형 식생활안전관리 추진 •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 강화
	2.2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2.2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대상 및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확대 • 가정 내 식생활 안전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영양교육 인적 자원 역량 강화
	2.3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과 영양 정보에 대한 인프라 확보			2.3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에 대한 신호등 영양표시 추진 • 외식업체 조리·판매 식품의 영양표시 조기 정착 • 식생활 안전관리 표시정책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식품표시 기준의 통일화 방안 마련
	2.4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표 1〉 계속

검토 (안) ¹⁾		확정안 ²⁾		
핵심 전략	중점 과제	핵심 전략	중점 과제	세부 실천과제
3.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3.1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지원	3. 어린이의 기호식품 안심 확보	3.1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나트륨 등 위해 영양성분 저감화 지원 •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3.2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확보		3.2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 컨설팅
	3.3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3.2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HACCP 적용 지원책 마련
	3.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3.3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해 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품질 개선
	3.5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해 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품질 개선
4.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기반 강화 및 모니터링	4.1 안전관리 제도 정착 기반 마련	4.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실효성 제고	4.1 식생활 안전 관리 제도 정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시행 정착 및 제도 보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지원
	4.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4.2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기호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소비자 단체 등 민간협력 구축 강화

자료: 1) 김혜련 등(2009).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진단 및 주요과제 도출연구
 2) 식품의약품안전청(20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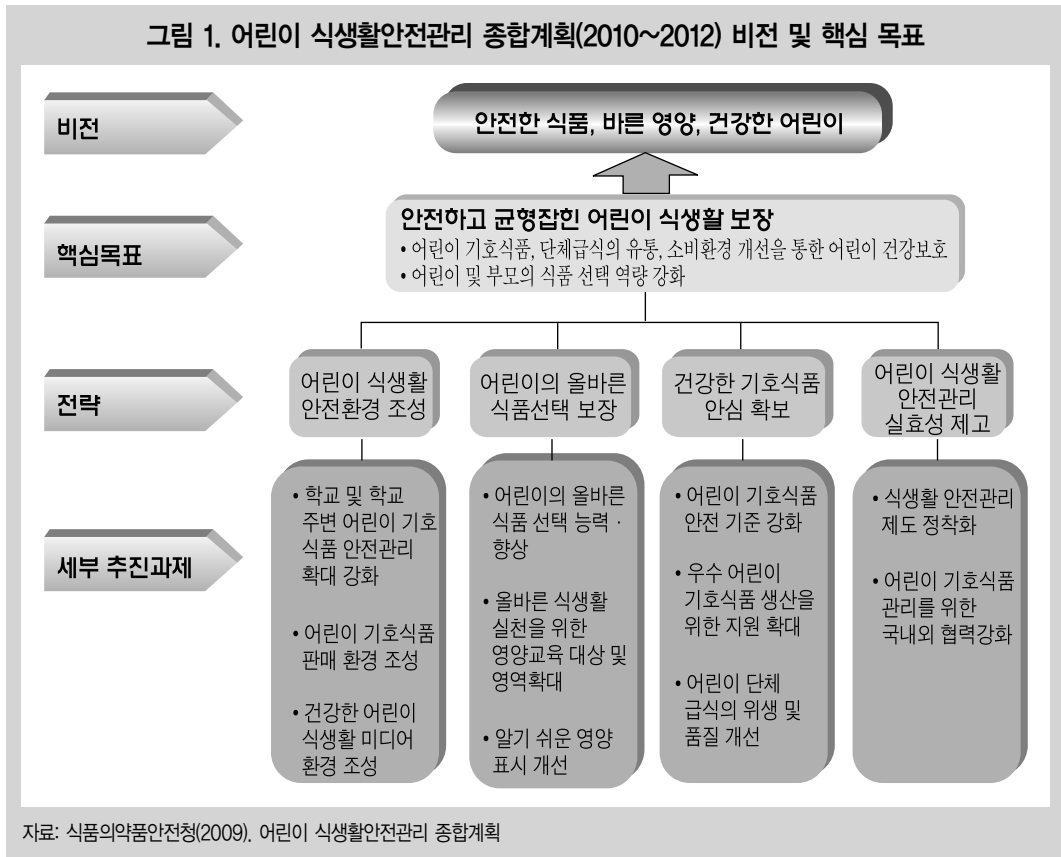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지속

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향후 과제는 세가지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의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현안 과제들이 정책의 현실적 시행과정에서 보완되고 정립될 필요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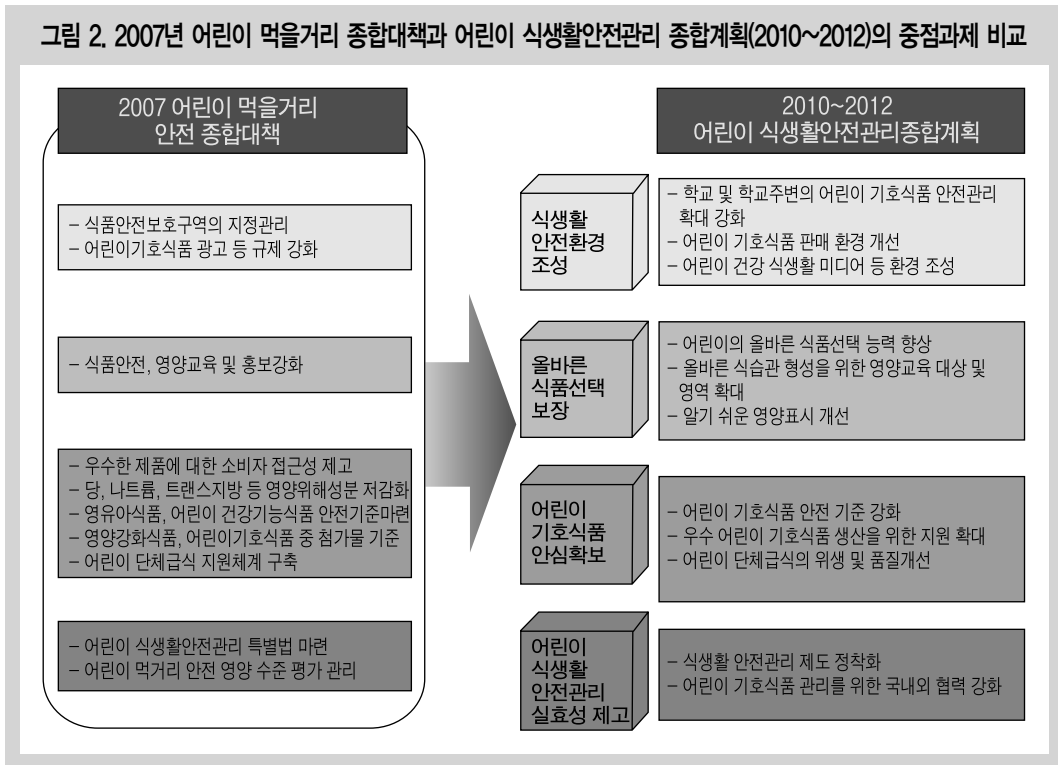
그림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10~2012) 비전 및 핵심 목표



-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학교 주변의 환경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식품안전구역보호구역의 설정·관리
-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학원 밀집지역과 다중이용 놀이시설 주변의 식품매점, 간이조리업소, 길거리에서 조리 판매하는 여러 종류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효과적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의 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제한이 어린이의 식품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여 광고 제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광고제한이 산업적 측면에서 식품산업계에 미치는 영

- 향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신호등 표시제와 같은 알기 쉬운 전면(FOP) 영양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분류 기준 마련 등 기초 준비작업 및 식품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유인책 강구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와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는 합리적인 방안 검토
- 지자체의 사업을 평가하는 타당성 있는 식생활안전지수의 선정과, 그리고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가령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가 자율적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스스로 높여가는 계기로 활용하게 하고, 점차

그림 2. 2007년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10~2012)의 중점과제 비교



타당성 있는 평가지수를 확립하여 평가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목적적인 평가제도로 발전시키는 평가방안 검토

둘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현과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 법과 종합계획에 담은 많은 내용들이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부처, 기관과의 포괄적 협력과 공동 추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식품안전 및 영양업무 부서와의 협력사업과 함께 공동 추진이 이루어져

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역할분담과 협력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사업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주체와 관련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과의 연계·협력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이 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에서 영양과 식생활교육 부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학교에서의 식생활과 영양 교육의 효과적 전달을 강조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의 주도적 역할, 부모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보건복지부의 전문적 기술적 지원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지자체에서도 식품안전과 영양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해 나갈 과제가 많다.

더구나 농수산식품부가 발의하여 제정된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2009년 5월 제정되어 있고, 최근 「국민영양관리법(안)」도 제정을 앞두고 있어 이들 2가지 법령이 시행되어 추진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식생활관리와 영양교육 분야는 특히 관련 부처나 부서간 역할의 상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 정책 시행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식품공급자로서 대다수의 식품산업체가 참여하여 건강지향적인 식품의 생산과 공급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계에 대한 규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과 식품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정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 산업이다. 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광고 규제 실시 등이 미치는 산업적 장단기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새로운 정책 대응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전체 식품업체로의 파급효과가 낮을 경우에는 특정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새 정책에 따르지 못하는 중소기업체가 생산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어린이들이 이전과 같이 쉽게

접하게 되어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식생활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식품기업 뿐 아니라 중소 식품업체에도 미칠 수 있는 정부나 학계의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신호등 표시제 등 가공식품의 전면(FOP) 영양표시제를 추진하는데 신호등 표시에서 적색 영양성분 표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우려와 식품산업에 미칠 수 있는 위축 영향을 식품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검토와 식품업계의 수용 현실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기업들이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식품에서 포화지방, 당, 나트륨, 식품첨가물 등 건강위해성분을 저감화하고, 식품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개발하는 데는 대체원료 확보, 신제품개발과 포장재 변경 등에 시간 소요와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식품산업계가 새로운 식품 정책에 대응하고, 준비할 기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새로운 영양표시를 인식하도록 충분한 교육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경험과 그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식품교역이 활발한 오늘날 우리 식품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제 식품규제 기준과도 조화를 이루어 우수하고 건강지향적 식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관련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4. 결론

선진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비만이 지난 20년간 급증하고, 한편으로 식품산업의 발달과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여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큰 비중으로 식생활과 영양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내 급식·구내매점과 자판기 등의 식품의 관리와 기준의 설정, 지방과 당분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및 탄산음료에 대해서 광고규제와 마케팅 제한, 열량·지방·당분·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는 전면(FOP) 영양표시제, 최근에서 외식의 영양표시제를 권장, 아동과 청소년

을 포함하는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가들과 공통된 과제 외에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에 여전히 식품안전상 불량한 식품섭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식생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이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으로 다른 선진 국가에서 보다 법의 제정이나 종합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에서 앞서 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규제 중심보다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고, 식품산업체와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립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